

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6년 5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1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5. 12. (화)	담당부서	원전산업관리과
담당과장	이옥헌 과장 (044-203-5321)	담당자	김혜원 사무관(044-203-5349)

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

- 산업부, 원전공공기관 '운영계획' 국회 보고,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5. 10.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*이 「원전감독법**」에 따라 수립한 '운영계획'을 보고했다.

* 대상기관: 한수원, 한전케이피에스(KPS)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전(원전수출분야)

**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【참고1】

- 원전공공기관 '운영계획'은 「원전감독법」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, 금번 '운영계획'은 '15.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.

* 지난 2월말 원전공공기관은 산업부에 '운영계획'을 제출, 4월말 '원전산업정책 협의회'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정

- '운영계획'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하여 구매·계약관리, 조직·인사관리, 원전시설관리, 국민소통·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【참고2. 기관별 운영계획】

①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, 품질문서 위·변조 검증체계를 구축함

-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·검증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다.

-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.

* (예시) 수요제기(정비팀) → 규격결정(구매기술팀) / 가격결정(재고통제팀) → 협상·계약(계약팀) → 제품인수(자재팀)

- '13.5월 원전비리는 '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'으로 촉발된 바, 재발방지를 위해 위·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했다.

-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한다.

- 또한,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,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
- 아울러, 품질문서 위·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(2~3년), 협력업체 등록취소(최대 10년)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.

② 기관별 조직·인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보완함

- 조직진단을 2~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했다.

- 구체적으로 한수원의 경우,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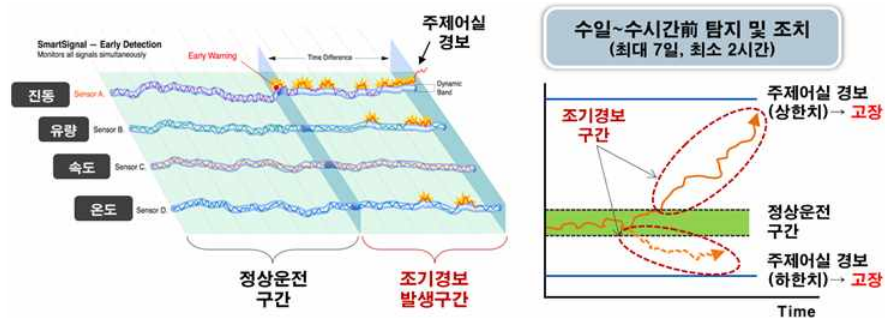
- 아울러,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'전문계약직'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.

③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장정지를 최소화했다.

-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한수원 본사에 구축하기로 했다.

-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정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나, 발전소 운영 데이터(1,200개/호기)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하여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제어실 정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해 조치할 수 있다.

<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념 >



-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고장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.

④ 원전 운영 정보공개 확대하고,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.

-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,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('15년 16회 개최 → '16년 24회 개최)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.

- 산업부는 '운영계획'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.

-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,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·감독해나갈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 관리과 김혜원 사무관(044-203-53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「원전감독법」 주요 내용

□ 원전공공기관의 안전·투명 경영 의무 (법 제6조~제9조)

분야	주요내용
구매·계약	수계약 최소화, 부정당업체 제재, 구매정보 사전공개 강화 등
조직·인사	주기적 조직건전성 진단·개선,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
설비관리	정비과정 투명성 확보, 정비업체 감독강화, 설비투자 계획수립 등
소통·참여	건설·운영 관련 정보공개, 주민참여제도 운영

□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 의무 (법 제14조~제18조)

구 분	행위제한	벌 칙
원전 공공기관 임직원	임직원(2직급 이상) 재산등록·취업제한 적용	「공직자윤리법」적용 (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	사익·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금지	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
	영리업무 겸직, 관련 협력체 투자 금지	징계의결 요구 의무화
	형법상 공무원 의제 및 뇌물죄 등 가중처벌	형법의 1/2까지 가중처벌
협력업체	뇌물수취, 서류 위변조, 퇴직자 고용, 부정한 정보 취득·이용 금지	① 원전공공기관 입찰제한 ② 과징금·가산금 ③ 벌칙(징역, 벌금)

* 입찰제한이 「국가계약법」(1개월~2년) 대비 강화(1개월~3년), 과징금·벌칙 병과 가능

□ 정부의 관리·감독 (법 제21조~제25조)

구분	주요내용
이행감독	법률상 의무사항(안전·투명경영·윤리의무) 준수여부 감독·점검
의무준수 조사	의무준수에 관한 조사, 자료제출 요구, 현장출입·서류검사 등
시정조치	시정요구, 「공운법」에 따른 기관장·상임이사 해임 건의·요구

* 이행감독 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, 안전 관련 사항은 원안위 통보

1.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

- (근거) 「원전감독법」 제20조(운영계획의 수립)
- (대상기관) 한수원, 한전KPS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전 (5개사)
- (주요내용) 「원전감독법」 제6~9조의 의무사항(구매·계약, 조직·인사, 원전시설관리, 국민소통·참여)에 대한 이행계획
- (수립·제출) 원전공공기관은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, 각 기관 이사회 보고 후 격년 2월말까지 산업부에 제출
- (국회보고)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원안위 통보 및 국회에 보고

2. 운영계획 주요 내용 [요약]

① 구매·계약 투명성 강화(법 제6조)

기관명	주요 내용
한수원	· 구매규격서 사전 공개·검증절차 운영 및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 · 구매조직 독립적 운영 및 외부 전문인력(SCM 전문가, 변호사 등) 확보 · 신규 인수품목 위·변조 적기 검증 및 공급사에 대한 품질전문가 멘토링 확대 시행
한전KPS	·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등 지속시행 · 구매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정착 및 구매품목에 대한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강화
한전기술	·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예고제 및 구매규격서 사전예고 시행
한전연료	· 공급자 품질서류 관리시스템 개발('16~)
한전	· 구매규격 의견조정위 운영(구매규격에 대한 업체 의견수렴) 등 · 외자구매 전자입찰시스템 신규 구축('16.4) 및 계약업무기준 개정

② 조직·인사 관리(법 제7조)

기관명	주요 내용
한수원	· 직무권한 개정 및 경영조정을 통한 역할과 책임 명확화 ·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· 순환보직 및 역량·성과중심의 평가 등을 통한 공정한 인사관리
한전KPS	·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조직 및 인력보강 ·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컨트롤리더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 양성 확대
한전기술	· 비리행위 엄중처벌(의원면직·징계감경 제한 등) 제도 운영 · 전 직원 역량진단 및 안전교육을 통해 원전설계 수행인력의 전문성 향상
한전연료	·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조직진단 시행, 직무중심의 직무체계 설계(직무관리시스템 구축)
한전	· 원자력 조직진단을 통해 최적의 조직 및 분장업무 조정 · 시스템중심의 인사운영 및 부정·비리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· 유관기관 교육을 통한 원자력 전문가 육성

③ 원전 시설관리(법 제8조)

기관명	주요 내용
한수원	· 중장기 설비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설비투자계획 수립·관리 ·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고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·운영 · 협력회사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유출 통제
한전KPS	· 원전 정비절차서 개정('16년 800건 계획) * 사업소별 동일노형/동일설비에 대한 절차서 비교/검토 및 미개발 절차서 신규개발, 정비 경험·사례 반영한 절차서 개정 등 추진
한전기술	· 보안관제실 구축('16년) 및 사이버-일반보안 융합 보안체계 수립
한전연료	·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('16.9), 무선침입 차단시스템 확장 구축 및 협력업체 보안교육 신설 운영
한전	· UAE원전 네트워크 정보보호 설비 보강(출력물 보안관리,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등) · UAE원전 관련사(한전, 두중 등 5개사) 보안협의회 운영

④ 국민 소통·참여(법 제9조)

기관명	주요 내용
한수원	· 원문공개제도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국민의견 수렴 창구 신설 · 원전별 지역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(원전운영 및 신규원전 정보공개) ·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및 주민 참여 유도
한전KPS	· 원전 정비기술 보유현황, 계획예방정비공사 수행현황 등 사전 정보공개 지속 추진('15년 145건 → '17년 160건)
한전기술	· 사전정보공개표목록 발굴 등 원자력 관련 정보개방 추진 등
한전연료	·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많은 정보를 사전정보공개로 전환 · 원문공개서비스 제공('16.12), 정보공개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(11명→20명)
한전	· UAE원전 건설사업 추진성과 홍보 등



Ministry
of Industry
& Trade